AI·빅데이터로 농산물 수급 예측

aT, 2018 주요업무 추진 계획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가동
비정규 310명 정규직 전환 추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올해부터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농산물 수급 예측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또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100개의 '시장 다변화 선도기업' 육성 및 집중 지원 전략도 추진된다.

특히 aT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세에 따라 회사 전체 비정규직 중 31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일 정부 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aT는 기존의 수급정보종합시스템을 올해부터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으로 고도화해 시범 가동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빅데이터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수급관리 시스템으로 기존 시스템에서 농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의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격 예측 기능이 추가됐다.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김형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기획조정실장이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AI 등을 이용하면 농산물 수급이나 가격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 적기에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국산 농산물 중심의 수급 안정체계 마련을 위해 식품산업에서도 국산 식재료 사용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산물 직거래와 연계해 지역 단위 푸드 플랜을 구축하고, 학교급식 공급망 관리도 강화한다.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계획도 내놨다.

aT는 시장 다변화 선도기업 100개사를 육성하기로 했다. 특히 수출 지원 사업별로 참가 업체를 선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먼저 선도기업을 선정 후 관련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폴란드 등 신시장 개척을 비롯해 대만, 말레이시아 등 전략 국가 내 수출품종 다변화를 추진하는 한편 대(對)중국 수출 회복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aT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세에 따라 회사 전체 비정규직 중 300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회사 전체 비정규직 437명 중 계약 기간을 고려해 310명을 내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것.

aT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기간제, 단기 계약직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직접 고용하고 파견 및 용역직은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 등을 전담하는 '사회가치창출부'를 신설해 중장기적으로 2022년까지 1만8000개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형목 aT 기획조정실장은 "aT 본연의 기능인 농산물 수급 안정과 유통개선, 수출진흥, 식품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남북간 농업 교류와 관련해서도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식량 원조 지원을 비롯해 농산물 유통, 북한 물자 반입 등의 경우 기존 업무 경험을 활용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보성·신안 갯벌, 습지보호지역 확대해야"

전라남도, 해수부에 확대지정 건의

전라남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보성과 신안 갯벌에 대해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의 갯벌'이라는 명칭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대상 지역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충청남도에 걸쳐 1,777.11㎢ 규모다.

전남지역 갯벌은 861.6㎢로 전체의 48.5% 규모이며, 이 중 신안 43.62㎢, 보성 10.30㎢, 순천 28㎢로 81.92㎢(9.5%)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해양수산부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어업인 등 지역주민, 지자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공청회를 열어 지정안을 마련한 후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해양수산부는 5개년 관리기본계획을 세워 주요 해양생물종의 서식처 보전 등 과학적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역관리위원회 운영, 오염·저감 방지시설과 주민·방문객 편의시설 설치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 /무안=김남중 기자

광주시,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20일 광주 광산구 옥동공원에서 제73회 식목일을 기념하는 나무 심기 행사가 열려 윤장현 광주시장(가운데 파란색 상의)과 공무원, 시민이 묘목을 심고 있다. /연합뉴스

전라도 이름 지은지 1000년… 26일 특별전

국립나주박물관

임진왜란 등 주제 3개 시리즈 마련

전라도(全羅道) 정명(定名) 천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이 열린다.

국립나주박물관은 문화재를 통해 천년의 전라도 역사를 읽을 수 있는 특별전시를 올해 세 차례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라도라는 지명은 고려 현종 9년인 1018년 전주(全州)와 나주(羅州)의 머리글자를 합해 하나의 행정구역 단위로 지어졌다. 2018년은 지명이 지어진 지 천년을 맞는 해다.

'호남의 임진왜란, 그 승리의 기록'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전시에는 나주 출신 무숙공 최희량이 쓴 임진왜란 승전보고서인 '임란첩보서목'을 중심으로 임진왜란 당시 전남해안 일대에서 전개된 전황을 소개한다. 전시는 26일부터 5월20일.

두 번째 특별전은 '삼별초와 동아시아'를 주제로 오는 6월26일부터 8월19일까지 이어진다. 삼별초의 탄생부터 마지막 순간까지의 과정을 강화도 강화중성, 전남 진도 용장산성, 제주 항파두리성을 따라가며 소개한다. 이 전시는 전라도 정명 천년과 올해 1100주년을 맞는 고려 건국 기념을 겸해 국립나주박물관과 국립제주박물관, 강화역사박물관이 공동으로 마련한다.

마지막 세 번째 특별전은 전라도 예술의 정수를 모은 '전라 명품전'이다. 광주와 전남, 전북지역에 남겨져 있는 각 시대를 대표하는 국보나 보물급의 명품 문화재 50여점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국립나주박물관 관계자는 "올 한 해 시리즈로 펼쳐지는 세 번의 문화재 전시를 통해 전라도라는 지역이 천년의 시간동안 국가와 민족의 역사 앞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실물유물로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김남중 기자 5555knj@metroseoul.co.kr

국립나주박물관은 2일 보물 제364호 나주 서성문 안 석등(羅州 西城門 石燈)이 88년 만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고향품으로 영구히 돌아와 오는 11일 오후 3시 박물관에서 점등식을 갖고 일반에 전시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립중앙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전시된 석등 모습. /뉴시스

목포시,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 달아준다

4200만원 투입… 비용 50% 지원

목포시(시장 박홍률)는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경비실 에어컨 설치 지원 사업을 오는 5월까지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목포시는 지난해 8월 관내 공동주택 경비실 에어컨 실태를 일제 조사한 결과, 111개 단지에 294개소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시는 경비원의 인권을 위해 올해 설치 지원 예산 4200만원을 확보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4월 20일까지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목포시 건축행정과에 접수하면 시는 적정 여부를 심의한 후 같은 달 30일까지 지원대상을 확정한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에어컨을 먼저 설치한 후 보조금 정산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시가 현장 확인 후 5월 말까지 설치비의 50%를 지원한다.

/목표=김남중 기자

"새 헌법, 민주주의 정신 바로 세울 것"

5·18 운동 담은 개헌안 공개에 광주단체들 한목소리로 환영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전문에 담은 청와대 개헌안이 공개되자 광주 5·18단체는 "새 헌법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신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반겼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20일 "5·18과 그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잊어서는 안될 소중한 가치를 기록하고 계승, 발전하겠다는 선언"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5·18은 부당한 권력에 참혹하게 짓밟힌 저항이자 끊임없는 진실규명 노력을 통해 부활한 항쟁"이라며 "우리 근현대사에 있었던 여러 저항 중에서도 특히 시민들 피와 땀과 눈물이 오랜 시간 축적된 아주 중요한 항쟁"이라고 말했다.

5·18 유가족과 부상자, 구속부상자 등으로 구성된 5월 3단체도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을 반갑게 맞았다.

정춘식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은 "5·18 헌법전문 수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광주민중항쟁을 통해 바로 설 수 있었다는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5·18을 헐뜯거나 왜곡하는 행위는 헌법을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양희승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도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의미 있는 업적"이라며 "기존 헌법에 대한민국이 상해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했듯 지금의 민주주의가 5·18정신을 계승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은 "5·18시민은 학생 조직과 정치 조직이 구속된 상황에도 부당한 폭압에 맞서며 1주일 동안 무정부 상태에서 폭동 없이 광주를 지켜냈다"라며 "그러한 정신이 민주주의 수호한 정신으로서 헌법전문에 수록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광주=김남중 기자

진도군, '연봉 1억' 고소득 어업인 373명

양식어업 활성화로 전년比 2.5%↑

진도군에서 1억원 이상 고소득 어업인 37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진도군은 2017년 기준 지역내 1억원 이상 고소득 어업인은 373명으로 2016년 364명에 비해 2.5%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소득 어업인이 늘어난 것은 진도군의 지속적인 양식산업 지원에 따른 양식어업 활성화의 영향 등으로 풀이된다

분야별로는 양식어업이 331명(88.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어선어업 24명(6.4%) 가공·유통 15명(4%) 등 순이다.

소득별로는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은 181명으로 전체 48.5%를 차지했다. 2억원 이상~3억원 미만은 91명(24.4%)으로 조사됐다. 특히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인 어업인은 92명(24.7%), 10억원 이상도 9명(2.4%)에 달했다

읍면별로는 고군면이 162명, 의신면 114명, 임회면 34명, 군내면 29명, 진도읍 20명, 조도면 8명, 지산면 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식어업을 비롯한 가공·유통, 어선 어업 등 분야별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어업소득 5000억원을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도=김남중 기자